

## 작년 수도권 레미콘수요 뒷걸음질

(2008. 1. 14)

아파트 등 주택건설경기 부진으로 지난해 수도권의 레미콘 수요가 소폭 감소했다. 13일 한국레미콘공업협회가 조사한 레미콘출하동향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레미콘업체들이 아파트 등 건설현장에 공급한 레미콘은 4,668만 9,900m<sup>3</sup>로 전년에 비해 5.2%, 257만 6,000 m<sup>3</sup>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는 민수용이 4,292만 5,800m<sup>3</sup>로 3.6%, 관수용이 396만 4,000m<sup>3</sup>로 19.9% 각각 감소했다. 또 하루 평균 출하량도 5.5% 줄어든 14만 9,900m<sup>3</sup>에 그쳤다. 권역별로는 수요가 많은 서울 중심권과 인천, 부천권의 출하량이 크게 감소한 반면, 여주·이천, 안양권이 두자릿수의 증가세를 기록하는 등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기 남부권의 출하량이 15.4% 감소한 것을 비롯해 경기 북부권과 파주·고양권 등도 9.0% 이상 감소하는 등 부진을 면치 못했다. 반면 여주·이천권과 안양권의 출하량은 230만 9,800m<sup>3</sup>, 340만 2,800 m<sup>3</sup>로 전년보다 각각 29.4%, 26.1% 증가하며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경기 동부권의 출하량도 8.4% 증가한 537만 8,300m<sup>3</sup>에 달하며 비교적 호조를 나타냈다. 지난해 수도권의 레미콘 수요가 이처럼 감소한 것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아파트 등 민간건축경기가 침체된데다 강우일수가 늘어나는 등 기상여건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3월과 9월의 경우 건설공사 성수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잦은 강우로 인해 출하량이 각각 24.4%와 30%가 급감한 것이 수요부진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레미콘업계 한 관계자는 “판교·인천·송도 등의 신도시 건설사업이 지속되고 서울 강북권의 뉴타운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올해의 경우도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정책들이 작동하고 있어 큰폭의 증가는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 쌍용, 동부산 레미콘공장 준공

(2008. 1. 20)

쌍용양회는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에 동부산산업소 레미콘공장을 신설하고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쌍용양회는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와 울산, 양산 지역의 건설현장까지 레미콘을 공급할 수 있게 돼 영남 남부지역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신설된 동부산산업소는 정관지방산업단지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간 80만m<sup>3</sup>의 레미콘을 생산할 수 있는 플랜트와 설비, 시멘트저장고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이 공장은 레미콘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최신설비와 운영시스템은 물론 분진과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밀폐형 골재저장고까지 갖춰 환경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쌍용양회 관계자는 “갈수록 규제가 심화되고 있는 환경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밀폐형 골재저장고 등을 갖춰 공장을 차별화했다”면서 “이곳에서 생산되는 레미콘은 부산은 물론 울산, 양산지역까지 공급이 가능해 앞으로 영남 남부지역 건설현장의 레미콘 수급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작년 PHC파일 판매 '好好'

(2008. 1. 21)

건축물의 고층화와 연약지반 공사의 증가 등 건설환경 변화로 지난해 고강도 콘크리트(PHC)파일의 판매량이 크게 증가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아파트 등 국내 건설현장에 공급된 고강도 콘크리트파일은 모두 491만 6,500톤으로 전년에 비해 16.5%, 69만 6,500톤이나 증가했다. 분기별로는 상반기에 24.1% 증가한 264만 100톤, 하반기 8.8% 증가한 227만 6,400톤이 각각 출하됐다. 특히 지난해 12월 한달 동안에는 52만 4,300톤이나 출하되며 비수기를 무색케 했다. 이와 함께 생산량도 14.2%, 60만 2,000톤 증가한 482만 5,900톤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출하량과 생산량 모두 예년 실적

에 비해 약 2개월분이 늘어난 셈이다. 고강도 콘크리트 출하가 이처럼 크게 늘어난 것은 인천 송도지구를 비롯해 부산 명지, 김해 울하지구 등 파일의 타설깊이가 깊은 연약지반의 기초공사용 수요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한 아파트, 주상복합, 업무용 빌딩 등 건축물의 높이가 높아지며 구경 500mm 이상의 대형규격 제품의 사용량이 늘어난 것도 수요증가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나아가 지난해 11월부터 인천제철의 당진공장에 월평균 10만톤의 물량이 투입되는데 당초 강관으로 설계됐던 현장들이 원가 상승, 수급불안 등을 이유로 고강도 콘크리트 파일로 설계를 변경, 수요증가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파일업계는 특히 지난해 말 착공이 지연됐던 현장들이 새해들어 속속 공사에 들어가고 파주 운정, 오산 세교, 김포 양곡, 인천 청라지구 등 대단위 지구에 대한 대기물량이 많아 3월 성수기에는 수급차질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파일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수요는 업계의 당초 전망치보다 30만톤 이상이 늘어나 사상최고의 호황을 누렸다”면서 “올들어서도 꾸준하게 수요가 활기를 띠고 있어 당분간 원활한 수급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 연료로 쓰고 시멘트 만들고...

#### 폐기물로 지구 살리는 유럽

(2008. 1. 30)

유럽은 재생에너지 천국이다. 기업이나 시민들 모두 지구를 살리는 재생에너지 활용에 적극적이다. 프랑스 파리 외곽 300km 남동쪽 라파즈 프렌지 공장. 1865년 지어진 이 공장은 1980년부터 폐기물을 재활용해 시멘트를 만드는 보조원료로 쓰고 있다. 12만m<sup>2</sup>의 넓이의 프렌지 공장에는 20층 빌딩만한 높이(70m)의 소성로(燒成爐)가 우뚝서 있다. 이 소성로에는 석탄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폐타이어와 폐유, 폐플라스틱, 재생기름 같은 온갖 폐기물이 석탄과 함께 불을 때는 연료로 쓰인다. 석회석이 주원료

인 시멘트를 만드는 과정에도 석탄회와 하수 침전물 소각재, 비철금속 찌꺼기 같은 온갖 폐기물이 쓰인다. 공장 옆에는 트럭들이 오가며 연료로 쓰는 가연성 고체 폐기물(Solid Sherred Waste)을 실어다 소성로에 붓고 있었다. 이 고체 폐기물은 외부업체에서 폐기물을 섞어 굳힌 뒤 불에 잘 타도록 담배 꼬초만한 크기로 다시 잘게 썰어준다. 프렌지 공장 연료 중 이런 폐기물 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57%. 라파즈는 버트란드 콜롱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1980년부터 이같은 폐기물 재활용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전세계 공장 중 10% 가량이 폐기물을 쓰고 있으며, 한국의 옥계공장도 이를 도입했다. 앞으로 꾸준히 활용률을 높여나갈 방침. 다니엘 드 마상 부사장은 “순환자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덕분에 1990년 시멘트 톤당 750kg였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06년 톤당 650kg으로 줄었다.

### 석탄대란 오나, 시멘트생산 중단 위기

(2008. 2. 5)

유연탄은 국내 발전 연료 가운데 원자력에 이어 두번째로 비중이 크다. 또 산업기계 가동용으로도 쓰임새가 다양하다. 한국은 이같은 유연탄이 나지 않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발전용과 제철용으로 820만톤을 수입했다. 이 가운데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량은 전체 중 21.7%다. 중국은 한국 유연탄 수입 비중에서 호주,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번째로 비중이 크다. 이같은 상황에서 중국에서 광산 폭발사고와 폭설이 발생하면서 중국 당국이 2개월간 수출 중단을 선언해 유연탄 수급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 중국의 공급 중단 선언은 가뜰이나 치솟던 석탄 가격 상승세에 불을 붙였다. 한국으로서는 공급 차질과 가격 상승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특히 시멘트업체 등은 중국산 유연탄 의존도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중국발 석탄 파동에 따른 가격 상승이 장기화될 경우 공장 가동 중단 등

극단적인 상황도 일어날 수 있다며 불안에 떨고 있다. 시멘트업계는 전체 유연탄 사용량 가운데 중국산에 34.3% 가량을 의지하고 있다. 러시아나 호주산 유연탄은 원가는 중국산과 비슷하지만 운임료가 월등히 높아 국내 시멘트업계는 대부분 중국산을 수입해 쓸 수밖에 없는 처지다. 보통 유연탄 수입 원가는 톤당 100달러 정도지만 중국산은 여기에 15달러 내외의 운임료가 붙는데 비해 호주산은 두배 많은 30달러의 운임료가 추가되고, 러시아산은 이보다도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멘트업계 관계자들은 업체 대부분이 1~2개월분의 재고만 비축해 놓았기 때문에 차칫 가동 중단 등 극단적인 상황까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 시멘트업계 '凍死위기'

(2008. 2. 10)

'중국의 폭설'이 국내 시멘트업계를 동사시킬 조짐이다. 국내 건설경기 침체로 시멘트 가격 인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유연탄 주요 공급국인 중국이 이달 초 발생한 남부지역 폭설로 유연탄 수출마저 전격 중단, 국내 시멘트업계가 단계적 감산 또는 일시적 생산 중단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시멘트업계는 연료의 85%를 유연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페타이어·벵커C유를 사용한다. 국제 시장에 발열량이 높고 품질이 균일한 유연탄을 공급하는 국가는 중국·호주·러시아 등이다. 이 가운데 국내 업체는 운임 등을 고려해 중국제를 80% 이상 사용하고 있어 중국의 유연탄 수출 중단의 직격탄을 맞은 상태다. 국내 시멘트업계는 이때문에 중국 폭설 이후 호주 및 러시아산 유연탄을 확보하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이마저 쉬운 일이 아니다. 호주산 유연탄의 현물 시세는 불과 1주일만에 95달러에서 105달러로 크게 올라 운임 30달러를 포함한 도입가격은 130달러를 넘는다. 게다가 동북아 지역을 다니던 벌크선들이 호주에 몰리면서 선박 대기 시간에 1달 이상이 걸려 현재 업체는 웃돈을 주고도 유연탄을 확보

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시멘트업계는 이같은 원재료가 상승에 따른 제품 가격 인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주름살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업계는 레미콘업계에 공급하는 시멘트 가격(수도권 기준)을 톤당 5만3,000원에서 6만2,000원선으로 올리겠다고 통보했지만 반발에 부딪혀 이달 톤당 5만 9,000원으로 간신히 합의했기 때문이다. 한편 유연탄 국제 시세는 2003년말 운임 포함 톤당 35달러 내외였으나 중국과 인도의 철강업 신·증설로 수요가 폭발해 2004년 65달러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초 70~75달러, 지난해 말에는 95달러까지 올랐고 이달 중국 폭설 등으로 인해 100달러를 돌파했다. 반면 국내 시멘트 가격은 2003년 톤당 6만 7,000원에서 2006년말 4만 8,000원까지 지속 하락하다 최근 5만 9,000원까지 오른 상태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국제 유연탄 시장은 2003년 이후 셀러(Seller)마켓으로 전환된 이후 최소 2010년까지 바이어(Buyer)마켓으로 돌아설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며 "벌크선 수급마저 2009년까지는 타이트할 것으로 보인다"며 시멘트업계의 어려움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 수질개선용 콘크리트 2차제품 나온다

(2008. 2. 25)

활성탄 등 카본계 흡착재를 활용한 콘크리트 정화조, 수로 등 수질 개선용 콘크리트 2차제품의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류현기 충주대학교 연구팀은 수질 개선용 콘크리트를 개발하기 위해 카본계 흡착재의 치환율 변화에 따른 수질개선용 콘크리트의 기초적 실험연구를 실시, 이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우선 수질개선 평가를 실시한 결과 카본계 흡착재 치환율이 증가할수록 구리, 카드뮴, 이온농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물 시멘트비 40%보다는 60%에서 구리와 카드뮴 이온농도의 감소량이 많았으며, 치환율 30~50%에서 24시간이 경과한 후부터는 수질개선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

타났다. 또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서의 슬럼프값은 카본계 흡착재 치환율이 증가할수록 감소했으며, 공기량과 단위용적질량도 감소했다. 다만 블리딩량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응결시간은 다소 지연됐다. 이와 함께 경화콘크리트의 압축강도 및 인장강도는 카본계 흡착재 치환율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치환율 30% 이상의 상태에서는 플레인 강도의 80% 이상의 양호한 강도를 보였다. 이밖에 흡수율 시험에서는 카본계 흡착재 치환율이 높을수록 흡수율이 증가했으며, 시간이 경과할수록 초기 젤에서 흡수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또 치환율이 높을수록 부유물질 제거, 구리 및 카드뮴 제거성능 등 수질개선 효과도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따라서 호안용이나 하천블록 콘크리트관 정화조에 이를 이용할 경우 수질개선용 콘크리트 2차제품의 생산이 가능하다고 연구팀은 강조했다. 특히 폐수가 이동하는 수로관과 우수의 배수통로 등에 유해물질을 흡착, 정화하는 성능을 지닌 콘크리트 2차제품을 적용할 경우 버려지는 오·폐수를 재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영월군, 청정소재산업 육성

114억원 투자

(2008. 2. 27)

강원 영월군은 석탄·시멘트를 대처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청정소재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27일 군에 따르면 한강 수계의 보호를 위한 환경오염 절감 소재와 태양광 발전산업 클러스터 조성 과 연계한 신재생 에너지 소재를 육성 분야로 정하고 올해부터 2012년까지 11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음달까지 이들 소재 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군산하 비영리 법인인(재)영월군 청정소재산업 진흥원 설립에 필요한 지원 조례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에 설립되는 진흥원은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와 관련분야 기업에 대한 창업보육 및 시험과 생산에 필

요한 기술자원과 연구개발 환경조성은 물론 신기술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을 담당하게 된다. 이와 함께 영월읍 팔괴리 동강 테크노빌리지내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300㎡ 규모의 '청정 소재 기술지원센터'를 2009년까지 건립할 예정이다. 또 동강 테크노빌리지에 3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터 면적 1,700㎡ 규모의 임대공장을 건립하는 등 기반시설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여건을 구축해 2016년까지 총 매출 1,000억원 규모의 60개 업체 유치로 2,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청정소재산업은 향후 시장성이 매우 밝은 고부가가치 산업분야로 지역의 산업구조 혁신과 자립경제 기반조성은 물론 지방 산업단지 활성화를 통한 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레미콘업계 "우리도 올려주오"

(2008. 3. 5)

원자재가 인상에 따른 불똥이 레미콘업계로 튀고 있다. 시멘트, 모래, 자갈 등 주요 원자재가격 인상으로 인해 레미콘 제조업체들의 단가인상 요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4일 레미콘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요 원자재가격 인상에 이어 경유가격까지 크게 오르면서 원가 부담이 12% 가량 늘었다. 그러나 건설사 납품가격은 업체들의 과열경쟁과 저가 수주로 수년째 정체돼 있어 원가 상승에 대한 부담을 고스란히 레미콘 업체가 감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수도권 소재 레미콘제조업체들은 현재의 단가로는 기업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수도권에서 시작된 가격인상 요구는 지방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레미콘 업체들의 채산성이 악화되면서 레미콘 수요가 감소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관련업체의 부도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682개 레미콘 업체 중 3.08%에 달하는 21개사가 부도의 여파를 피해가지 못했다. 이는 같은 기간 건설사 부도율보다 4배 가량 높은 수치다. 레

미콘업체의 60%가 밀집된 수도권 지역 업체들도 2월말 대표자 모임을 갖고 단가 인상을 요구기로 결정했으며 가격인상 요구 공문을 각 건설사 영업부에 발송하는 등 꾸준히 가격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업체들은 건설사 납품시 불이익을 우려해 직접적으로 나서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에 경유가격 인상이 겹치면서 레미콘업체가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그러나 건설사에 직접 가격인상 요구를 할 경우 납품이 어려워질 수 있어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 또 일부 업체에서 저가 수주를 할 가능성이 있어 이리저리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방 레미콘 업체들도 단가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은 최근 지역 건설사에 단가 인상을 고려해 달라는 문서를 보냈다. 또한 레미콘 업체들이 건설사를 직접 방문해 레미콘 원가 상승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며 가격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특히 지방 건설시장이 침체되고 원가도 오르는 이중고에 있다”며 “직접 찾아가 설명이라도 해야 레미콘사들의 도산을 멈출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사들은 시멘트 및 레미콘 가격 인상을 빌미로 분양원가를 인상하고 있어 레미콘업체의 빈축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레미콘은 아파트 등의 건축구조물의 완성공사비 중 3% 미만이지만 건설사는 레미콘을 분양원가에 반영해 분양가격을 올리면서도 오히려 레미콘업체에 무리한 가격인하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레미콘 업체들은 수요자인 건설사에서 가격인상에 따른 원가 상승 부담의 짐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골조공사의 부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레미콘 단가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 수도권 레미콘 수요 소폭 늘어 (2008. 3. 10)

올들어 수도권의 레미콘 수요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 레미콘공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 한달동안 서

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출하된 레미콘은 250만 2,900m<sup>3</sup>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2%, 53,100m<sup>3</su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문별로는 민수용이 243만 1,900m<sup>3</sup>로 5.5%, 12만 5,700m<sup>3</sup> 증가한 반면 관수용은 50.6%나 감소한 71,000m<sup>3</sup>에 그쳤다. 또 하루 평균 출하량도 11만 3,700m<sup>3</sup>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1.5%, 11,700m<sup>3</sup> 늘었다. 이로써 올들어 지난달까지 출하된 레미콘은 모두 523만 5,500m<sup>3</sup>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 20만 700m<sup>3</sup>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달의 경우 설 연휴로 7일간의 휴무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증가해 향후 수요증가에 대한 레미콘업체의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 지난달 레미콘 수요가 이처럼 증가한 것은 대형공사 현장이 밀집된 송도·청라지구 등 인천·부천권역의 출하가 강세를 보인데다 경기 북부권과 동부권의 신규 아파트 현장들이 수요를 유발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레미콘 12개社, 공장가동 전면 중단 (2008. 3. 13)

경기 여주·이천 지역 중소 레미콘업체 12개사가 13일부터 공장 가동을 멈췄다.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소속 1,000여개사 대표자들이 전날 서울 여의도에 집결해 ‘원가 상승에 따른 가격 인상’을 요구하며 집단 시위를 벌인데 이는 지역조합 차원의 집단행동이 시작된 것이다. 다른 지역에서도 동조파업이 이어질 경우 건설현장에 적지 않은 공사 차질이 우려된다. 건설 및 레미콘업체에 따르면 삼표, 한라, 경기레미콘 등 중부지역조합 소속 12개 업체는 이날 오전부터 공장 가동을 멈추고 사실상 ‘파업’에 들어갔다. 중부지역조합 이사장인 서낙원 경기레미콘 대표는 “시멘트와 골재 등의 원가 상승분을 반영해달라는 합리적인 요구가 전혀 먹히지 않고 있다”며 “건설사들의 성의있는 협상안이 제시될 때까지 무기한 파업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합은 현재 m<sup>3</sup>당 평균 4만 8,000원 안팎인 이 지역 레미콘

납품가격을 최소 5만 5,100 원으로 14.7%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주·이천 지역에는 현재 삼성포스코 대우 성호 등 10여개 건설업체가 아파트 등을 짓고 있으며 이 지역 레미콘사로부터 하루 3,000~4,000m<sup>3</sup>의 레미콘을 공급받아 왔다. 이와 관련,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파업은 연합회의 방침과는 별도로 결정된 사안”이라면서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전국 지역단위조합이 상당수에 이르는 만큼 추가 공장 가동 중단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소속 대표자 1,000여명은 국회의사당 앞에 집결, “납품단가가 최소한 m<sup>3</sup>당 9% 이상 올라야 원가를 맞출 수 있다”며 이를 반영해주지 않으면 19일부터 순차적으로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성신양회 노사 임금동결 선언

(2008. 3. 17)

성신양회는 17일 서울 본사에서 김재실 사장과 오시백 노조위원장 등 노사 양측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 임금동결을 선언했다. 이날 노사는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어려운 경영환경을 극복하고 회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8년 임금동결에 합의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임금동결 선언은 최근 유연탄 가격 급등과 수요감소 등 시멘트업계의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노사 화합의 결과”라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올해 경영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 시멘트업체 “물류비라도 아끼자”

(2008. 3. 18)

국제 원자재 값 인상으로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국내 시멘트 업체들이 철도 수송용 벌크양회화차를 공동 사용하기로 합의하는 등 물류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다. 코레일 강원지사에 따르면 쌍용양

회와 동양시멘트, 라파즈한라시멘트 등 국내 7개 시멘트 업체들은 현재 각 회사별로 운영하고 있는 철도 벌크 수송화차를 다음달부터 공동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삼척과 삼화, 옥계역 등에서 출발하는 철도 벌크양회 화차가 공동 사용되면 화차 수급이 원활해지고 물류비용도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쌍용양회와 동양시멘트 등 7개 시멘트업체는 모두 2,800여량의 벌크양회 화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철도를 통해 1,648만톤을 수송했다. 쌍용양회 관계자는 “원자재 값과 환율 인상 등 어려워지는 기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물류비용 절감 등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멘트업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원자재인 유연탄 가격이 뚝뚝 주춤수입국인 중국, 호주의 기상이변에 따른 수출과 생산 중단으로 원자재 확보에 이중고를 겪고 있다.

### 레미콘 생산중단 돌입 건설현장 비상

(2008. 3. 19)

레미콘 조합이 생산중단에 돌입해 건설공사의 차질이 예상된다.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레미콘 납품가격 인상을 요구했지만 건설업체가 협상 테이블에도 나오지 않은 관계로 19일 오전 0시를 기점으로 전국의 670개 조합원사가 무기한 생산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자율적으로 공장 문을 레미콘 차량으로 막고 레우회(레미콘업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간부들이 각 공장을 다니며 감시하고 있다. 이날 생산중단에는 지역 건설사와 가격 협상을 진행중인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조합원사들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미콘 조합이 소속된 업체가 생산하는 물량이 전체 물량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 조합원사의 생산중단으로 전국적으로 건설 공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레미콘업계는 “현재 상황에서 레미콘 가격이 m<sup>3</sup>당 최소한 12% 오르지 않을 경우 저급 골재를 사용해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부득이 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레미콘업계는 이와 함께 공공 부문에 대해서도 직접 구매를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자재의 직접 구매를 확대하라는 것은 사실상 주택공사와 SH공사를 겨냥한 요구사항이다. 이들 두 기관은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하는 발주기관으로 레미콘은 낙찰된 회사가 조달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저가로 공사를 수주한 시공사는 레미콘에 대해서도 저가 납품을 요구하며 시장 가격을 떨어뜨리고 있다. 레미콘업계는 주공 현장의 납품단가가 건설사에 납품하는 레미콘 가격보다 5% 정도 낮다고 지적하고 있다. 레미콘업계는 관급공사 계약방식의 변경도 요구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관급공사가 작년 단체수의계약에서 중소기업간 경쟁입찰방식으로 바뀐 뒤 레미콘의 경우 업계 특성을 감안해 관행적으로 한 기업이 전년 실적 대비 110% 이상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입찰수량이 제한되었다. 그러나 감사원으로부터 이러한 입찰수량 제한이 규정에 없는 자의적인 것이라는 지적을 받아 올해부터 완전경쟁입찰로 바뀌어 일부 큰 레미콘 업체가 물량을 독식할 우려가 있다고 레미콘업계는 주장해왔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건설업계는 레미콘 생산 중단 상황에선 절대 협상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는 "현장을 점검해 공정 변경이 가능한 곳은 레미콘 타설 대신 철근배근이나 다른 기초 공사를 우선 시행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 레미콘 수도권 생산중단...

### 건설공사 차질

(2008. 3. 19)

서울·경인지역의 중소 레미콘업체가 원자재값 급등에 따른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하며 19일부터 조업중단에 들어가 수도권 일대의 건설공사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레미콘조합연합회 산하 서울·경인레미콘조합은 "19일 0시를 기점으로 무기한 생

산 중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레미콘업계에 따르면 생산중단에 참여한 업체들은 자율적으로 공장 문을 레미콘 차량으로 막고 레우회(레미콘업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 간부들이 공장들을 다니며 감시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 서울·경인지역 레미콘 조합사 수는 모두 100여개. 배조웅 서울·경인조합 이사장은 "수도권 지역이 전국 레미콘 물량의 40% 정도 차지하고 있다"며 "서울·경인 업체들은 거의 100% 생산중단에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의 중소 레미콘 조합사들이 생산하는 물량은 전체 물량의 60%에 이른다. 경기도 이천 공장에서 10여대 레미콘 차량을 운영 중인 한 조합사의 관계자도 "이천·여주쪽 12개사는 이미 지난 13일부터 물량 출하를 중단되었다"며 "경기 북부에선 경영난으로 문닫은 업체가 많은 걸로 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레미콘조합연합회는 "지난해보다 시멘트 30%, 자갈 26% 가량 가격이 올랐지만 레미콘 가격은 5년간 제조원가를 밀도는 상황에서 레미콘 가격이 m<sup>3</sup>당 최소 12% 인상반영이 안되면 저급 골재 사용으로 부실시공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주장했다. 연합회는 건설사들이 적정한 가격 인상안을 제시할 때까지 생산중단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또 레미콘업계는 조달청에도 관급입찰수량을 전년도 관수 공급실적의 110% 이내로 제한한 관급공사 계약방식을 변경해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레미콘조합연합회는 이같은 요구사항을 담은 청원서를 조만간 청와대 중소기업비서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같은 중소 레미콘업계의 생산 중단으로 공급이 막히자 수도권 일대 아파트 등 일부 건설 현장에서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중견 건설업체 D건설이 짓고 있는 경기도 이천시 갈산동 아파트 공사 현장은 현재 공정률 50%를 기록한 상태에서 일손을 놓은 상태다. 지난 13일부터 레미콘 납품이 끊겼고, 15일부터 콘크리트 타설 차량인 펌프카 조합원들도 파업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천시 송정동에 20층짜리 아파트 5개동을 짓고 있는 또 다른 D사는 옥탑을 포함해 7개층 공사를 남겨두고 콘크리트

타설이 중단됐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레미콘 공급 중단이 장기화되면 아파트 공사 차질로 입주 지연 등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일단 콘크리트 타설 대신 철근 조립 등 대체 공정을 먼저하고 펌프카는 비회원 개인사업자로 대체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아스콘공업조합연합회는 18일 대전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납품단가 인상과 관급 공사 계약방식 개선을 요구하는 야외집회를 벌였다. 아스콘조합연합회는 정부와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26, 27일께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4월 1일부터 전면 생산중단을 결의할 계획이다.

### 한전 ‘시멘트업계 유연탄 긴급지원’ 체제 가동 (2008. 3. 20)

한국전력 이원걸 사장은 최근 중국탄 수출중단과 호주·남아공의 석탄 공급물량 감소에 따른 국가적인 유연탄 수급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발전회사 사장단 회의를 3월 19일 긴급 소집, 발전회사의 재고물량을 관련업계에 스왑거래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최근 유연탄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시멘트업계 5개사에 유연탄 지원을 우선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한전과 시멘트업계는 한전의 자회사인 발전회사 재고물량 중 일정량을 업계 간에 스왑을 통해 수시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 최근 중국탄 도입지연으로 재고량이 감소하는 등 유연탄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시멘트업계는 한전의 긴급지원체제 가동에 대해, 시멘트업계가 유연탄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한전의 지원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멘트업계의 소규모 석탄 도입물량을 발전회사와 공동으로 구매토록 추진함으로써 시멘트업계의 연료 도입비용과 수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한전의 자회사인 발전회사도 회사간 스왑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연료비와 수송비용을 절감하고 있으며, 지난 2월에는 이미 6만톤의 스왑

을 추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한전-발전회사 공동으로 인도네시아, 호주 등 해외 자원개발 진출확대를 통한 자주개발 물량을 확대하여 에너지수급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발전회사간 공동구매를 지속적으로 늘려 안정적인 수급기반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한전은 한편 부존자원이 풍부한 중국, 중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지에서 발전과 자원개발을 연계한 패키지 방식의 해외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자원개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한전과 발전회사는 세계 석탄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주기적인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연료 수급안정을 통한 전력수급 안정기반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한전은 국제연료시장 급변에 대응하고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초긴축경영에 발전회사도 동참하기로 함으로써, 어려운 대외경영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 주공, 100년 지속되는 집 짓는다 (2008. 3. 24)

수명이 100년이 넘는 ‘장수명 주택’을 보급하기 위한 전시주택이 충남 아산신도시에 들어선다. 장수명 주택이란 현재 30~40년 정도인 아파트 수명을 100~200년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지어질 주택을 말한다. 주택공사는 장수명 실험주택인 ‘모코업 하우스’를 아산신도시 1단계 지역에 건설하는 공사를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장수명 주택은 내구성과 가변성을 높여 주택 수명을 늘리는 것으로 철근 콘크리트는 물론 내장재의 수명을 늘리는 기술을 도입한다. 또한 주거공간을 자유자재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서 건물이 사회적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어 가구마다 화장실이나 방의 구조 변경 등의 필요가 생길 때 이를 쉽게 바꿀 수 있도록 설계되며 주택을 사무실로 변경하거나 집을 2개로 분리하는 등의 변화도 가능해진다.



## 레미콘 단가 최고 8.7% 인상 다음달부터 적용 (2008. 3. 25)

서울, 수도권 레미콘 단가가 현행보다 최고 8.7% 인상된다. 인상 단가는 4월 1일 출하분부터 적용된다. 대한건설자재직협의회(이하 건자회)와 영우회는 25일 3차 가격 협상에서 서울 및 수도권 레미콘 가격을 단일화하기로 하고 현행가 대비 서울은 6.5%, 수도권은 8.7% 각각 인상키로 최종 합의했다. 이는 수도권 기준으로 m<sup>3</sup>당 평균 4,250원(25-24-12 규격 기준) 상승한 것이며 기준 협정가격표 대비 적용률로는 서울이 종전 82%에서 87%로 5%p, 수도권 이 80%에서 87%로 7%p 각각 오른 것이다. 이번 가격 인상분은 다음달 1일 납품하는 레미콘부터 적용되며, 인상폭은 내년 3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양측은 이번 가격 협상에서처럼 공급 중단의 사태가 빚어지지 않도록 향후 가격 조정시 협상 기간에는 레미콘 업체가 공급중단 등 파업은 하지 않기로 단서조항을 달았다. 건자회 이정훈 회장은 “국내 시멘트 등 원자재 값 상승분을 반영하면서 건설 공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양측이 서로 양보했다”고 말했다.

##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합리적인 가격에 주택 공급” (2008. 3. 26)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6일 “주택업계가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주택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장관은 이날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가진 주택업계와의 조찬 간담회에서 “그동안 공급자 중심으로 주택정책을 펼쳐왔는데 이제는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규제가 겹겹이 쌓여 업계가 어렵지만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대명제하에서 어떻게 정답이고 어떻게 원칙인지 고민하면서 업계와 함께 문제를 풀어가겠다”면서 “주택업계 프렌들리(Friendly)한 장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정장관은 특히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주택공급을 원활히 하고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제대로 맞추게 되면 모든게 잘 풀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택업계는 분양가 상한제, 전매제한 등 참여정부에서 만들어진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것과 더불어 기본형건축비 추가 인상 및 가산비용 현실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 및 금융 지원, 수도권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추가 해제 등을 건의했다. 신훈 주택협회장은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인 정책과 엄청난 규제 때문에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실제 미분양이 20만가구 이상이고 ‘청약을 제로(0)’ 아파트가 전국 28개 단지 7,800가구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미분양의 원인을 업체들이 안팔리는 지역에 지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아파트는 3년전부터 준비에 들어가 금융을 일으키고 분양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미분양이 많은 것은 분양하려는 시점에 규제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고담일 주택건설협회장도 “작년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이후 업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수도권 비인기지역과 지방의 미분양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주택업체의 자금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철근, 레미콘 가격 급등과 사재기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민간택지에 대한 전매제한을 6월부터 없애기로 했으며 공공택지에 대한 전매제한도 줄이는 방안을 상반기중에 마련할 계획이다.